

‘철학적 무정부주의자’의 도덕적 담론

자유와 질서 향유 위해선 질서와 규범 필요



박효중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

김상봉 교수의 책에서 우선 느껴지는 것은 그의 도덕관과 정치관, 국가관이 매우 유별나다는 것이었다. 또 윌리엄 오컴의 ‘유명론(nominalism)’도 떠올리게 됐다. 전반부에 등장하는 ‘파시즘’이나 ‘노예도덕’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얼른 머리에 와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치열한 지성적 성찰을 전제로 한 ‘이성성’보다 이목을 끌고 보자는 소피스트의 ‘선정성’이 묻어나고 있는 이런 말들이 생뚱맞게 느껴지는 것은, 애국심에 관한 기존 도덕 교과서 설명을 논리와 이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는 김 교수의 주장과 묘한 역설과 대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칸트주의자인 저자가 ‘파시즘’과 같은 사회과학적 용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제된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진보주의자들은 흔히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체제나 사상을 ‘파시즘’이라고 매도하는데, 김 교수도 이런 지적 유행을 따라가고 있어 유감이다. ‘파시즘’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체제나 히틀러의 나치체제를 의미하는 용어다. 이 체제의 사악성은 외부의 압박으로부터 붕괴되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한국은 권위주의 체제는 있었지만, 사적 영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전체주의적 속성을 갖는 파시즘 체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김 교수의 책을 읽다보면, 인간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대로 ‘정치적 동물(zoon politikon)’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플라톤의 ‘이데아의 세계’에서나 있음직한 ‘보편적 인간(homo universalis)’이나 칸트의 ‘목적의 왕국’에서 세계 시민으로 살고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갖게 한다. 과연 우리는 그런 존재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하이데거의 지적대로 자신의 선택과 관계없이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서 일정한 민족과 국가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이다. 두 발을 땅에 디디며 사는 구체적 형태의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인 이상, 그 특정한 공동체를 가꾸고 일구어 나가야 하는 ‘도덕적 의무’와 ‘정치적 책

무’가 있다. 또 그 책무는 우리보다 앞서 이 땅을 살아간 조상들로부터 받은 것이며, 이 공동체를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무도 있다. 따라서 우리 공동체는 존속과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당연히 이 공동체에는 ‘보편성’의 개념으로만 파악하기 어려운 특정한 질서와 규범이 요구된다. 법과 질서의 개념을 단순히 ‘억압’이라고 생각하거나 법과 질서에 복종하는 태도를 전체주의적 태도라고 낙인찍는다면, 도덕적 결벽증이거나 정치적 감수성의 결여가 아닐까. 혹은 ‘포스트 모던적 사고’의 결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필자의 생각에 김 교수는 ‘도덕주의자’이며 ‘철학자임’에는 틀림없으나, ‘무정부주의자’에 가깝다. 물론 ‘철학적 무정부주의’가 전적으로 틀렸다고 비난할 의도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있다. 인간은 ‘자유인’이며 ‘자유인’으로 살기를 소망하지만, ‘자유’의 역설(paradox of freedom)을 상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무제한의 자유를 누리고자 하면, 아무도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절제가 요구되고 법에 대한 복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유공동체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질서와 규범이 요청된다. 그렇다면 절제나 복종의 덕목은 ‘주인의 도덕’일뿐, ‘노예의 도덕’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또 절제나 복종의 덕목을 내면화한 사람이 불의에 복종하는 사람도 아니다. 정의를 받아들이고 불의를 배척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거창하게 불복종 태도라고 이름을 붙일 필요조차 없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진리를 추구하며 치열한 삶을 살아온 지성과 교육자들을 독설로 매도하는 것은 자신도 마시고 있는 샘에 침 뱉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독설과 소피즘으로 책이 주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지성의 정도는 아니다. 오히려 본인이 그토록 싫어하는 천박한 자본주의 논리에 입각한 인기영합 방식이 아닐까.